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사·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 일 시 : 2015. 3. 5(목)
- 시 간 : 10:00 ~ 17: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대회의실)



충 청 남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계획 3**
- **2015년도 갈등관리 역점 추진사업 5**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17**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계획

◇ 각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과 함께 현안 갈등 관련 토론 등을 통하여 갈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임

① 워크숍 개요

○ 때 · 곳 : 2015. 3. 5(목) 10:00 ~ 17:00

○ 참 석 : 22명

-충청남도 (5) : 도민협력새마을과장, 갈등관리팀장 및 팀원

-시 · 군 (15) : 갈등관리 관계관

-플러스충남 (2) : 포럼위원

② 주요내용

□ 道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설명(道 갈등관리팀)

○ 道 갈등관리부서 신설에 따른 충남도 차원의 공공갈등 관리계획

□ 플러스충남포럼 현장활동 소개(최진하 충남포럼 운영위원장)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소개

○ 2015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계획

□ 갈등전문가 특강(국민권익위원회 김재운 전문위원)

○ 공공갈등 현안사례

□ 토론 및 발표

○ 시·군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 시 · 군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3 진행 계획

일 정		내 용	비고
10:00 ~ 10:03	3 ′	◦ 개회 및 국민의례	
10:03 ~ 10:10	7 ′	◦ 참석자 소개	
10:10 ~ 10:20	10 ′	◦ 인사말씀	도민협력 새마을과장
10:20 ~ 10:30	10 ′	◦ 충청남도 갈등관리 추진계획	
10:30 ~ 10:40	10 ′	◦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소개	최진하 위원장
10:40 ~ 12:00	80 ′	◦ 갈등전문가 초청 특강	
12:00 ~ 13:00	60 ′	◦ 점 심	
13:00 ~ 13:40	40 ′	◦ 현안갈등 발표·토론(보령, 부여, 서천, 청양)	
13:40 ~ 14:20	40 ′	◦ 현안갈등 발표·토론(공주, 논산, 계룡, 금산)	
14:20 ~ 14:30	10 ′	◦ 휴 식	
14:30 ~ 15:00	30 ′	◦ 현안갈등 발표·토론(천안, 아산, 예산)	
15:00 ~ 15:40	40 ′	◦ 현안갈등 발표·토론(서산, 홍성, 태안, 당진)	
15:40 ~ 16:20	40 ′	◦ 시·군 현안 갈등에 대한 종합 토론	도민협력 새마을과장
16:20 ~ 16:50	30 ′	◦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갈등관리팀장
16:50 ~ 17:00	10 ′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2015 갈등관리 역점추진 사업
-도민협력새마을과 갈등관리팀



2015. 3. 5(목)

2015년도 갈등관리 역점 추진사업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순서

1. 갈등관리 부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1
2.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4
3.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강화	6
4. 갈등영향분석	8
5. 협조 당부사항	9

참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부서별 역할 ❷ 공공갈등 관리 체계도 ❸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 명단 ❹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

① 문제점

- 그동안 도내 갈등에 대한 동향파악으로 모니터링 수준
-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미흡

② 개선방향

- 공공갈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 공공갈등 진단표 등급별 분류 후 1·2등급 기술적 검토 이행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적극적인 갈등관리
- 갈등조정 협의회를 통한 지원 강화
 - 등 현안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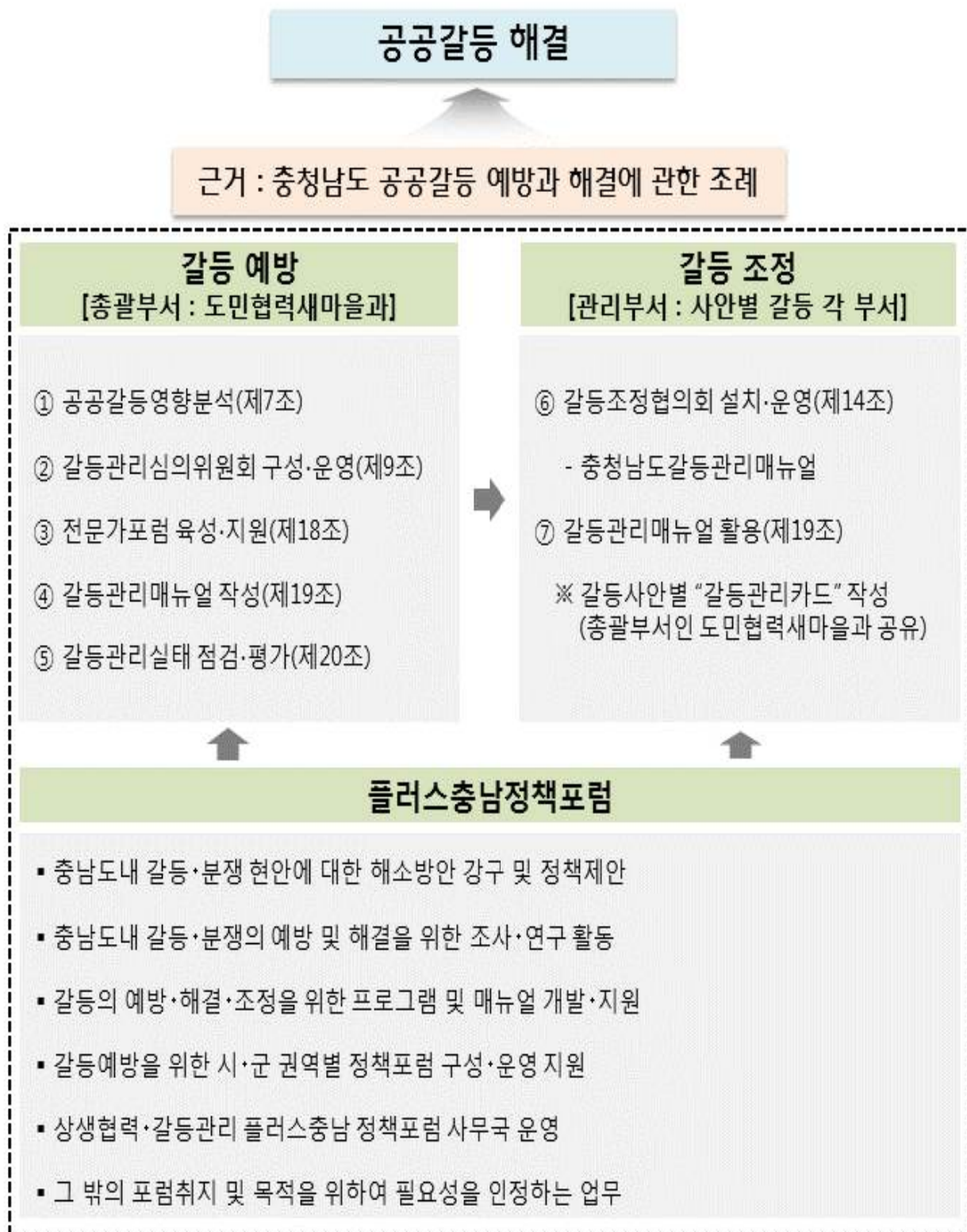
③ 그동안 추진사항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전면 개정('14.12.30. 공포)
 - 정책수립 등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 예방, 제도적 절차 마련
- 타 지자체 갈등관리 벤치마킹 등을 통한 갈등관리 방향정립
 -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15. 1. 16.)

④ 앞으로 추진계획

- (갈등관리팀)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플러스충남정책포럼을 활용한 지원 확대

참 고 1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부서별 역할



참 고 2 공공갈등 관리 체계도

■ 예방적 대응 ■

공공갈등 진단
- 정책입안 前,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 사업부서(공공갈등진단 1,2등급)

공공갈등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

갈등현안 검토회의
- 사업 및 정책 수정·보완

■ 갈등조정 체계도 ■

공공갈등요인 발생

사업부서 ↔ 도민협력새마을과 ↔ 플러스충남

갈등현안
검토회의 개최

현장평가, 기술검토
(플러스 충남)

갈등영향분석
(플러스 충남)

갈등조정협의회 등
(플러스 충남)

참여적의사결정 방식
적극활용, 결과반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업 및 정책 수정·보완

갈등해결(사업추진)

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①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 기 능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추진
 - 도 및 시 ·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 · 조정 등
 - 구 성
 - 인 원 : 20명 이내 (위촉 : 도지사)
 - 임 원 : 위원장(호선), 간사(도민협력새마을과장), 서기(갈등관리팀장)
 - 임 기 : 2년(공무원은 재임기간)
- ※ 제2기 위원 임기 : '13. 6. 13 ~ '15. 6. 12

② 그동안 추진사항

- 제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15명) : '13. 6. 13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4. 7. 28
 - 갈등관리 종합계획 자문, 갈등관리 목록 선정 여부 심의 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현장방문(경기도 시화호) : '14. 12. 29

③ 앞으로 추진계획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분기1회) : '15. 3
 - 갈등관리 목록 대상 정비 및 영향분석 대상 선정 등
-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재구성 : '15. 6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위원구성 확대

참 고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촉직	박재묵	· 충남대학교 교수(사회학과)	위 원 장
〃	김태연	· 천안 YWCA 회장	부위원장
〃	김종필	· 충청남도의회 의원	
〃	나재호	· 중도일보 기자	
〃	신기원	· 신성대학교 교수(복지행정과)	
〃	신흥철	· 온양신문 발행인	
〃	심효숙	·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장	
〃	유진숙	· 배재대학교 교수(정치언론학과)	
〃	원성수	· 공주대학교 교수(대외협력본부장)	
〃	이지아	· 변호사	
〃	최진하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당연직	김갑연	·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장	
〃	채호규	·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	이현우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	조원갑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간 사	이순근	·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장	

①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8조, 제21조)
- 구 성
 - 임 원 : 39명(상임공동대표 :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 공동대표단(5), 고문(3), 감사(2), 운영위원장(1), 지역원로(11), 자문위원(11), 전임공동대표단(6)
- 위원회 : 103명(4개 위원회)
 - 운영위원(8), 전문위원(37), 분과위원(49), 편집위원(9)
- 주요기능
 - 도내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통한 갈등 조기 해결
 - 갈등의 예방·해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지원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등

② 앞으로의 추진계획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재구성 : '15. 4
-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 '15. 7
 - 4대 권역 구성 : 시·군 갈등심의위원회 위원 중심
- 권역별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 역할 강화 및 컨설팅 강화
- ※ 도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15개 시·군 중 現 7개 시·군 설치

참 고 4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도,시·군별	조례 제정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회 구 성	비고 (구성일)
충청남도	2010. 11. 10.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15명 (위촉직 11, 당연직 4)	13.6.13.
천안시	2011. 9. 14.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미설치	
공주시	2012. 12. 7.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9명 (위촉직 5, 당연직 4)	13.7.3
보령시	2011. 9. 20.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미설치	
아산시	2012. 11. 5.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15명 (위촉직 9, 당연직 6)	13.6.24.
서산시	2011. 9. 30.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미설치	
논산시	2011. 10. 31.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14명 (위촉직 11, 당연직 3)	14.9.22.
계룡시	2013. 6. 30.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미설치	
당진시	2011. 10. 31.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15명 (위촉직 10, 당연직 5)	15.02.06.
금산군	2012. 12. 31.	제7조(설치·기능)	14명 (위촉직 7, 당연직 7)	13.7.22
부여군	2011. 12. 30.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미설치	
서천군	2011. 9. 27.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15명 (위촉직 11, 당연직 4)	12.5.4.
청양군	2011. 12. 20.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설치예정	
홍성군	2011. 12. 30.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미설치	
예산군	2011. 7. 15.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14명 (위촉직 9, 당연직 5)	11.8.11.
태안군	2013. 3. 8.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미설치	

IV 공공갈등 영향분석

1 추진목적

- 사업 추진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 대응계획 수립과 맞춤형 갈등 조정으로 도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

2 2014년 공공갈등 영향분석

- 분석대상 : 지자체의 주요 갈등사업 중 대두되는 갈등
- 분석기간 : '14. 4. 1 ~ '14. 6. 30
- 분석결과

연번	갈등명	쟁점이해당사자	원인 (수준)	해결수단	해결 방향
1	청양매립장설치	생활/정주여건 VS 매립장 조성 (청양군↔주민 업체↔주민)	생활/환경	제3자개입 (협의체구성)	중재
2	내포 신도시 집단 에너지 설치	생활/정주여건 VS 발전소건설 (충남도↔지역주민)	생활/환경	제3자개입 (협의체구성)	조정
3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생활/정주여건 VS 국가안보 (국방부↔지역주민)	생활/환경	제3자개입 (협의체구성)	중재
4	서산희망공원 자연장조성사업	생활/이익 VS 지역개발 (서산시↔지역주민)	생활/환경	당사자간해결 (보상,대책마련)	합의
5	대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활/정주여건 VS 지역개발 (서산시↔지역주민)	생활/환경	당사자간해결 (보상,대책마련)	합의

3 앞으로 추진계획

- 갈등 등급 분류 및 갈등진단 대상 확정 : '15. 3
- 갈등영향분석 의뢰(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15. 4
- 갈등영향분석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 '15. 6월
- 심의위원회 자문 및 영향분석 결과 사업부서 통보 : '15. 7월

□ 갈등관리 부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관내 갈등에 대한 동향파악인 모니터링 수준을 벗어나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도·시군 간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상시 비상 연락망 구축

□ 현안 갈등사항 보고체계 구축

- 관내에서 발생한 갈등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 후 신속한 전달 체계 구축 운영
- ※ 시군 자체 동향보고 시 도민협력새마을과(갈등관리팀) 병행

□ 시·군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구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화가 구성되지 않은 시·군은 2015년 상반기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①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1조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07. 5. 23

② 포럼 구성

□ 구성 인원(142명)

○ 임 원 : 39명(상임공동대표 :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 공동대표단 5, 고문 3, 감사 2, 운영위원장 1, 지역원로 11, 자문위원 11

※ 운영위원장 : 최진하 정책특별보좌관

○ 위원회 : 103명(4개 위원회)

- 운영위원 8, 전문위원 37, 분과위원 49, 편집위원 9

※ 2015년 포럼 구성 신규위촉 예정

□ 주요 기능·역할

○ 도내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통한 갈등 조기 해결

- 연구, 토론, 여론형성 및 갈등현장 지원 활동

○ 갈등의 예방·해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지원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 그 밖의 포럼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무

③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재 원			비 고
	계	국비(특교)	도비	
계	960,000	260,000	700,000	
2007	60,000	40,000	20,000	특교 40,000천원 (2006 재정인센티브-명시이월)
2008	150,000	150,000	-	' 07 경상사업비
2009	50,000	20,000	30,000	도비 30,000천원(본예산10,000/회추경20,000)
2010	50,000	50,000	-	특교 50,000천원(' 10 재정인센티브-성립전예산)
2011	90,000	-	90,000	도 비
2012	140,000	-	140,000	"
2013	140,000	-	140,000	"
2014	140,000	-	140,000	"
2015	140,000	-	140,000	

④ 2014 추진실적

□ 갈등관리 정책 및 현장지원

- 갈등영향분석 5건 수행
- 갈등관리 기획과제(갈등사례 연구) 수행
- 공공갈등 현장지원 35회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갈등 환경협의회 운영
 - 청양군 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관련 현장 활동 실시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관련 현장 활동 실시

□ 충남형 갈등관리 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 참석
- 갈등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권역별 포럼 연계 사업 실시
 - 4대 권역별 포럼 업무협의를 통한 연계사업 선정
 - 행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한 권역별 포럼 경쟁력 강화 실시
- 갈등관리 홍보 주력
 - 정기간행물 '열린충남' 상생+협력 4회 발간

□ 기타

- 전용 홈페이지 운영
 - www.pcpf.or.kr 연중 운영
- 갈등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 갈등관리 T/F 운영
 - 갈등 동향 파악 창구의 다원화, 해결 창구의 일원화
 - 관계관, 시민단체, 충남포럼 주축

⑤ 포럼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포럼 구성·운영 문제점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의 목적은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있음
-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현안문제 공론장 마련, 갈등관련 연구를 통한 다수 전문가의 정책의견 수렴 및 제안기능 강화등의 주요 사업 수행
- 충청남도 공공갈등 해결 목적과는 접근 방법이 다름

□ 권역별 포럼 활성화 부진

- 4대 권역별 포럼의 전문력·자치 사업능력 부진
- 각 권역별 시·군의 갈등관리 예산을 받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심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자생력 부재

□ 포럼 운영상 위치

- 충남포럼은 2007~2012 도 보조금으로 운영된 민간 거버넌스 조직임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갈등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활동에 공식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연구중심 → 현장지원 중심의 운영방향 전환
- 민·관 협력기구 → 공신력 확보 노력
 - 4대 권역별 포럼 재구성(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 포함)
 - 민간위원 중심에서 공식조직 위원 포함
- 도·시·군 갈등관리 적극 지원 및 대응
 -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갈등잠재요인 파악 및 갈등관리 지원

Ⅱ 2015 주요 업무계획

① 추진방향

☐ 갈등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운영

-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 공공갈등 갈등영향분석 등 道 현안 정책지원
- 기획과제 연구 등 현안해결 중심 연구

☐ 갈등관리 제도 및 절차 프레임 구축

- 절차적 프레임 구축 및 운영지원
 -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 갈등관리 제도 보완

☐ 갈등예방·관리 역량 강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지원
- 동향 파악을 위한 언론 모니터링 및 사안별 갈등 분석, 갈등완화기법 전파 등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② 세부 추진계획

☐ 갈등관리 연구

- 갈등영향분석 연구
 - 공공갈등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원인과 쟁점, 합의형성절차 설계의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 갈등현안 중심 해결방안 마련 기획연구
 - 지역내 상생협력방안 연구

갈등관리 교육·학습

① 갈등관리담당관 교육연수

- ‘충남형 갈등관리’ 교재를 활용한 시·군 갈등관리담당자, 갈등관리심의위원 대상 교육·학습 실시
- 지역의 ‘갈등관리주체의 자기책임’에 의한 추진 유도

② 시·군별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자치단체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역량 강화 노력 지원
- 시·군별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③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

- 도, 시·군, 민간 전문가의 유연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장중심형 갈등관리

① 현장중심형 사무국 운영

- 지역내 갈등사안의 종합적 관리 체계 수립
- 시·군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
- 도내 갈등사안 발생시 신속대응 및 처리 체제 구축

② 제도 및 절차 프레임 보완

- 위원회·협의회 운영등 절차적 프레임 강화, 갈등관리 주관 부서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로 갈등현안 대응 신속성 발휘
- ‘갈등관리메뉴얼’, ‘기술진단표’ 등 갈등관리제도 보완
- 갈등관리목록 정비,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등 갈등의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특강자료

- 공공갈등 현안사례 및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윤)

공공갈등 현안사례 및 참고자료



2015. 3. 5.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윤

Contents



- I. 공공갈등 현안사례
- II. 갈등 개관
- III. 공공갈등의 이해
-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VI. 조정제도의 이해
-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 시작하며 : 통계 하나 >

-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하루 평균 1,500여 명, 연인원 38만여 명
- 그에 따른 예산 지출 약 100억 원

(2014. 6. 27. 경남지방경찰청 발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생존 필수시설이자 복지

3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1. 사업 개요

- 한국전력공사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원군 북경남변전소까지 765kV의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원군 등 5개 시·군 지역에 송전탑 161기를 건설하는 공사
- 밀양지역은 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면 등 5개 면 지역에 송전탑 69기를 건설

4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2. 추진 경과

2000. 1.	정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2001. 5.	한전, 신고리원전 ~ 북경남변전소 765kV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2007. 11.	정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2008. 7.	밀양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쫓기대회
8.	송전선로 건설사업 착공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2010. 11.	경실련 주관 밀양송전탑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2012. 1. 16.	밀양주민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 분신 사망
9. 24.	국회현안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2013. 12. 2.	밀양주민 유한숙씨 음독, 나폴 만에 사망
2014. 6. 11.	밀양시, 5개 송전탑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9. 23.	송전탑 설치 완료

5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3. 이해관계자

(1) 직접적 이해관계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밀양주민(철탑부지, 경과지 소유자, 주변지역 토지 소유자)

(2) 간접적 이해관계자

-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주민
- 국민(?)

6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4. 갈등의 내용

- 사업 필요성(백지화)
- 전자파(계) 피해
-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 손실보상 현실화
- 대체 수단(지중화, 초전도케이블, 345kV 활용 등)

7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5. 갈등 발생의 원인

- 사업 필요성 등 이해 설득 및 의견수렴 미흡
-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의 의사결정
- 경과지 선정 등 절차에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 손실보상 관련 법령 미비
- 시민사회 미성숙 및 참여 구조 비비
- 갈등 관련 법, 제도, 절차의 미비

8

I. 공공갈등 현안사례(밀양 송전탑)

6. 입법에 의한 해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4. 1. 28. 제정 / 2014. 7. 29. 시행
- 주요 내용(765kV)
 - 재산적 보상지역 :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m 이내 지역
 - 주택매수 청구지역 : 각각 180m 이내 지역
 - 주변지역 지원사업 : 각각 1,000m 이내 지역
 -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 소급의 문제
 - 부칙 제2조(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적용
 -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9

I. 공공갈등 현안사례(제주해군기지)

1. 추진 경과(1)

일시	추진 내용
1993. 12.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소요 결정
2007. 5.	제주도,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1,500명 중 찬성 54.3%, 반대 38.2% - 후보지역별 주민 각 1,000명 중 강정 56%, 화순 42%, 위미 36% 찬성
2007. 6.	해군기지 건설지 강정마을로 결정
2007. 8.	강정마을 반대입장 발표
2008. 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2009. 1. 14.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10

I. 공공갈등 현안사례(제주해군기지)

1. 추진 경과(2)

일시	추진 내용
4. 20.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소송 제기
2009. 4. 27.	국방부 · 국토해양부 · 제주도 기본협약서(MOU) 체결
2009. 8. 26.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투표율 11%)
2010. 3. 15.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2010. 7. 15.	1심 판결 선고(실시계획승인은 무효, 변경계획은 적법)
2011. 6. 16.	항소심 판결선고(각 항소 기각)
2012. 7. 5.	대법원,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적법 판결

11

I. 공공갈등 현안사례(제주해군기지)



박영석, 김토일 기자 / 20120229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NEWS

12

I. 공공갈등 현안사례(재단법인 설립)

1. 대구지하철 참사 및 재단법인 설립 갈등 개요

-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김○○의 방화로 일어난 화재사고
- 이로 인해 2개 편성 12량(6량×2편성)의 전동차가 모두 불타고 뼈대만 남았으며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
- 국민성금 중 75억 원을 출연금으로 추모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여 (가칭) 218안전문화재단 발기인총회(2010. 12. 24.)를 거쳐 공익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재산출연증서'를 미교부

13

I. 공공갈등 현안사례(재단법인 설립)

2. 이해관계자

(1) 직접적 이해관계자

- 대구광역시
- (가칭)218안전문화재단
- 관련 단체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218대구지하철참사유족회
 -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등

(2) 간접적 이해관계자

- 안전행정부
- 상가번영회(팔공산 동화지구)

14

I. 공공갈등 현안사례(재단법인 설립)

3. 갈등의 내용

○ 임원 구성

○ 상임이사제 존폐

○ 임원의 임기 제한

○ 목적사업의 범위(추모사업 포함 여부)

○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매장 유골 문제 등

15

II. 갈등 개관

1. 갈등의 의의

- 갈등 : 서로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된 상태
cf. 갈등은 내재된 갈등(latent conflict), 분쟁은 표출된 갈등(manifest conflict)

2. 갈등의 개념 요소

- ①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
- ② 갈등당사자들이 Zero-sum상황에서 서로 대립되는 갈등내용이 있음
- ③ 갈등당사자간 이익 등이 충돌하고 있음
- ④ 갈등당사자간 동태적, 상호의존적 과정
- ⑤ 갈등당사자간 다른 목표들을 좌절하도록 유발하는 과정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임동진(2012) 자료

16

II. 갈등 개관

3. 갈등의 발생 원인

- 양립 불가능한 목표의 상충
- 가치, 인식, 신념 등의 불일치
- 희소자원의 상호 경쟁
- 이해관계의 충돌
- 갈등 관련 법.제도.절차의 미비
- 시민사회 미성숙 및 참여구조 미비

17

II. 갈등 개관

4. 갈등의 유형

[1] 갈등의 당사자를 기준

- 내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조직갈등, 집단 간 갈등, 국가 간 갈등
- 민관(民官)갈등, 민민(民民)갈등, 관관(官官)갈등
- 세대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등

[2] 갈등의 쟁점(갈등발생 분야)을 기준

- 산업갈등, 의료갈등, 교육갈등, 정치갈등, 환경갈등, 이념갈등 등

18

II. 갈등 개관

[3] 갈등발생의 원인을 기준

구분	정의	해결을 위한 접근
사실관계 갈등	사건, 자료, 언행에 대한 사실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객관적 자료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사실증명, 공동조사
이해관계 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지위,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공정한 배분시스템, 합리적 의사 결정제도
구조적 갈등	사회, 정치, 경제 구조와 왜곡된 제도, 관행, 관습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제도적 개선과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
관계상의 갈등	불신, 오해, 편견 등 상호관계의 이상으로 생기는 갈등	인사소통의 통로 확보 및 확대, 변환적 조정
가치갈등	가치관, 신념, 세대, 정치관, 종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인견수렴,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다종교간의 대화, 다문화이해 교육
정체성 갈등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정체성의 인도적 훼손이나 강요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공동역사연구모임, 중립적 이해를 위한 상호이해교육

19

II. 갈등 개관

5. 갈등의 기능

- 순기능 : 사회 발전(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증가를 가져 오는 사회구조의 변동)의 원동력
- 역기능 : 분열과 혼란을 초래, 사회적 비용 유발,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

구분	역기능	순기능
관점	갈등은 역사적 산물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기능	평형상태의 상실과 부조화 등 갈등의 역기능 강조	사회발전/통합을 위한 구조적 필연성 등 갈등의 순기능 강조
방법	갈등은 제도적, 권위적, 강압적 방법으로 관리, 통제, 해소 가능	갈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해결, 변화 가능
초점	법과 질서	절차와 상호작용
건강한 사회	갈등이 없거나 가시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	갈등이 평화적, 건설적 동력으로 전환되는 제도와 문화가 있는 사회

20

II. 갈등 개관

6. 갈등 인식의 변화

전통적 관점	현대적 관점
거부감	수용적 태도
제거대상	예방 및 해결
억압적	참여와 협력
갈등의 잠복	갈등의 적극적 관리

21

II. 갈등 개관

< 찾아보세요 >

- 사람마다 관심사, 가치관, 감성이 다름



- 인식의 차이



- 의사소통의 실패

※ 5분 동안 한 사람만 본 후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22

III. 공공갈등의 이해

1. 공공갈등의 의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Cf. 공공갈등 : 공공정책과 같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강영진, 200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갈등의 주요한 당사자

공공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

이해관계자간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이나 관여를 필요

23

III. 공공갈등의 이해

<비교> 민원의 의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24

III. 공공갈등의 이해

〈비교〉 고충민원의 의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세
부
내
용

민원 처리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그밖에 행정과 관련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25

III. 공공갈등의 이해

〈비교〉 개념의 범위



26

Ⅲ. 공공갈등의 이해

2. 공공갈등의 특성

- (1)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특정 곤란
: 직접적 이해관계자+간접적 이해관계자
- (2) 복합갈등(가치갈등+이익갈등+사실관계갈등)
- (3) 공익을 둘러싼 갈등 : 공공재의 공급 및 수요
- (4) 편익과 비용구조의 불일치 : 수익자, 부담자의 불일치
- (5)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 (6) 막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공사 지연, 중단 시의 비용
- (7) 원상회복의 어려움 : 막대한 철거비용, 귀책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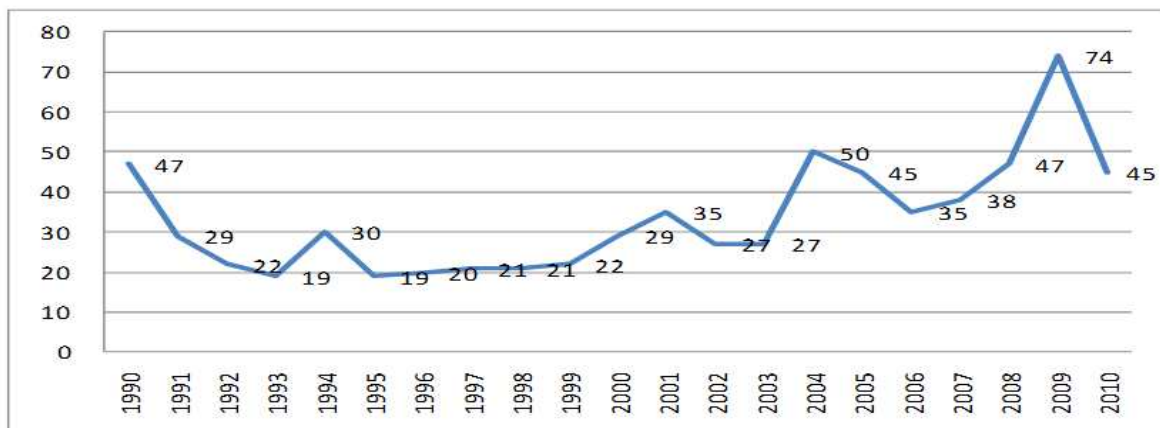
27

Ⅲ. 공공갈등의 이해

3.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현황

[1] 발생 현황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중 702건의 공공갈등 발생
- 연평균 33.4건의 공공갈등 발생



출처 : 단국대학교 기상준(2012)

28

III. 공공갈등의 이해

(2) 갈등유형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정도

유형	건수	비율(%)
노동	194	27.6
개발	163	23.2
교육	83	11.8
시장	70	10.0
환경	59	8.4
보건복지	39	5.6
이념	29	4.1
문화	23	3.3
기타	42	6.0
합계	702	100

29

III. 공공갈등의 이해

(3) 갈등주체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정도

갈등주체	건수	비율(%)
민(民) : 관(官)	473	67.4
민(民) : 민(民)	200	28.5
관(官) : 관(官)	29	4.1
합계	702	100

(4) 갈등성격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정도

갈등성격	건수	비율(%)
이익 : 이익	526	74.9
이익 : 가치	119	17.0
가치 : 가치	57	8.1
합계	702	100

출처: 단국대학교
가상존(2012)

30

Ⅲ. 공공갈등의 이해

(5) 갈등유형별 갈등주체 분석

갈등유형	민 : 민	민 : 관	관 : 관	계(%)
이념	1	28	0	29
개발	11	138	14	163
노동	128	66	0	194
시장	14	55	1	70
교육	30	52	1	83
문화	2	20	1	23
환경	7	50	2	59
보건복지	4	34	1	39
기타	3	30	9	42
합계	200	473	29	702

31

Ⅲ. 공공갈등의 이해

(6) 갈등유형별 갈등성격 분석

갈등유형	이익 : 이익	이익 : 가치	가치 : 가치	계(%)
이념	0	11	18	29
개발	132	29	2	163
노동	182	8	4	194
시장	64	6	0	70
교육	38	25	20	83
문화	12	4	7	23
환경	34	25	0	59
보건복지	31	6	2	39
기타	33	5	4	42
합계	526(74.9)	119(17.0)	57(8.1)	702(100)

32

III. 공공갈등의 이해

(7)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료 방식

구분	이념	개발	노동	시장	교육	문화	환경	보건복지	기타	계
협상	3	17	88	11	5	1	7	7	2	141
조정	0	5	8	3	0	1	3	1	0	21
중재	0	2	5	0	3	0	1	0	0	11
전면적수용	1	40	6	4	11	7	17	4	9	99
부분적수용	1	19	8	7	8	3	6	6	7	65
관의 집행	3	16	6	5	12	2	3	4	4	55
관의 진압	0	5	2	1	0	1	0	0	0	9
3자 관의 진압	1	0	14	0	3	0	0	1	0	19
입법	6	3	14	15	9	3	0	7	4	61
법원판결	5	13	5	6	14	2	4	4	4	57
주민투표	0	1	0	0	0	0	2	0	2	5
철위	7	17	32	9	12	3	7	5	5	97
진행중	2	25	6	9	6	0	9	0	5	62
계	29	163	194	70	83	23	59	39	42	702

출처 : 단국대학교 가상준(2012)

33

III. 공공갈등의 이해

(8) 현황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시사점

- 갈등의 과도한 발생보다는 갈등의 장기화, 즉 갈등해결의 지체
 - 전통적 분쟁해결제도(법원판결, 입법 등)의 해결 지체
 - 갈등해결까지 입법 : 786일, 법원판결 : 971일 소요
-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대안적 갈등해결제도(ADR)의 활성화
 - 갈등해결까지 중재 : 272일, 조정 : 205일 소요
 - 사회적 비용(참여자수와 지속일수)의 측면에서 볼 때, 조정과 중재를 통한 갈등종료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임
- 총 702개의 공공갈등 중 약 70%에서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
 - 정부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 필요성 대두

출처 : 단국대학교 김학린(2010)

34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1] 행정쟁송제도 : 행정심판

의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 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절차
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존재이유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완**, **법원의 부담 경감**

종류

- 취소심판 : 처분의 취소나 변경
- 무효 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

35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2] 행정쟁송제도 : 행정소송

의의

법원이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

종류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 소송
-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

36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3]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구분	구제 대상
헌법소원심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인권위원회 진정	○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평등권(차별행위 금지)의 경우 사인들간의 차별행위도 포함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7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2.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구분	구제 대상
헌법소원심판	중국적인 분쟁 해결 수단
행정소송	
행정심판	
인권위원회 진정	간이 · 신속한 권익구제제도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 헌재 2000헌마546 화장실 결정

38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3. 분쟁해결제도의 단점

(1) 적격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 : 기본권이 침해된 자(보충성)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 법률상 이익

인권진정의 진정한 적격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자

심사청구의 청구인적격 : 이해관계 있는 자

〈사례〉 대법원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39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2) 타이밍(제소기간)

헌법소원 심판 →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인권위 진정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감사원 심사청구 →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부적법 각하사유

40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3] 대상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인권위 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0조~제22조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

〈사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11737 판결

41

IV. 기존의 분쟁해결제도

[4] 기타

판결 등의 경직성

〈사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75 등

소송 등 소요 시간

투입비용 : 변호사 비용 등

사후 해결 수단(사전 예방 기능 부재)

42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률상 권리관계 등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기존의 소송을 통한 방식 대신에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민사조정이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조정 등

예) 다양한 형태의 협상, 조정과 중재 등

43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2. 등장 배경

사회구조의
복잡화

사회적 가치의 판단
범주 확대

갈등 양상 및 구조의
다양화 및 첨예화

‘소송’ 을 통한 분쟁해결의 한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 등장

44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3. 기능

- 과도한 소송비용의 회피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 분쟁해결결과에 대한 수용성(受容性) 제고
- 분쟁해결기관의 전문성

45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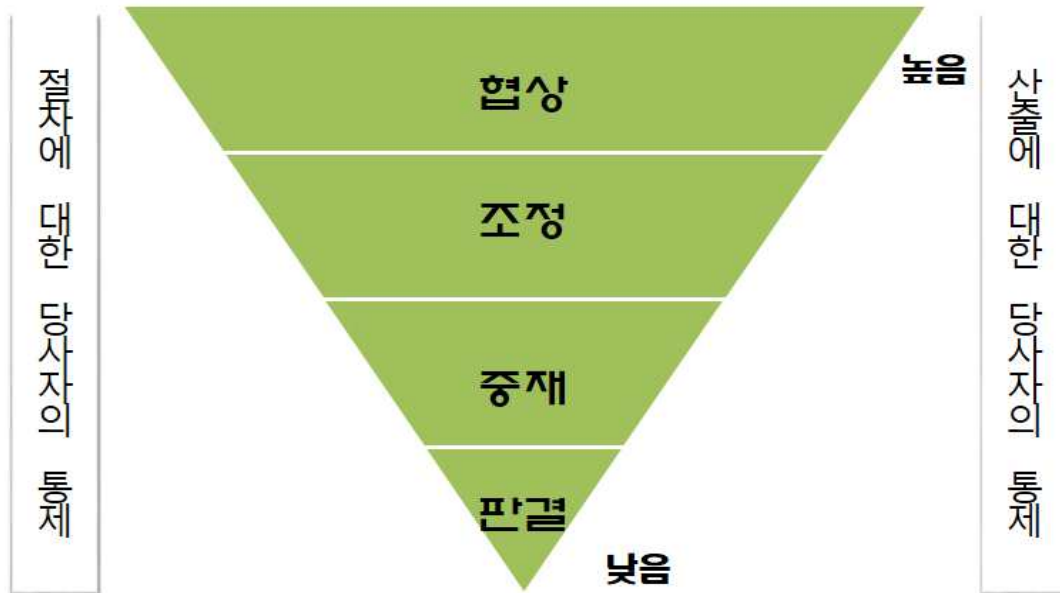
4.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협상(Negot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 · 보편적 수단 ○ 당사자가 분쟁해결 과정과 산출에 있어 최대한 통제권 발휘
조정(Med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와 관련된 제3자 개입 ○ 협상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에 추진력을 제공
중재(Arbi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으로 산출과 관련된 제3자 개입 ○ 중재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
혼합적 모델 (Hybrid Mod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조정, 중재를 혼합한 형태의 분쟁해결방법

46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5. 유형별 특징



47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6.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와 행정분쟁

협상

-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분쟁 해결
- 처분 등이 기속행위인 경우 한계

중재

- 분쟁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을 전제
- 중재계약을 기초로 당사자 일방이 중재 신청 가능
- 중재인의 중재결정이 강제력이 가짐

➔ 민·상사 사건에 주로 이용, 행정분쟁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음
「중재법」 제1조

48

V.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7. 행정분쟁과 관련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알선(斡旋)

알선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해당 분쟁에 대해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예) 「환경분쟁조정법」 제27조, 「권익위법」 제44조 ‘합의의 권고’

조정(調停)

조정기관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방식. 예) 「권익위법」 제45조

재정(裁定)

재정기관이 일종의 준사법적 절차로서 양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예) 「환경분쟁조정법」 제36조~제45조

49

VI. 조정제도의 이해

1. 조정의 개념

조정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안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2. 조정의 장·단점

장점	단점
제3자의 절차적 통제만으로도 협상에 상당한 효과 발휘	강제성이 없음
자율적 협상의 장점을 유지	실효성이 떨어짐

50

VI. 조정제도의 이해

3. 조정의 기본원칙 또는 요건

중립성(Neutralität)

신뢰성(Vertraulichkeit)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

비공식성(Informiertheit)

자유의사(Freiwilligkeit)

51

VI. 조정제도의 이해

4. 다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의 구별

■ 협상

구분	협상	조정
제3자 개입	당사자들이 주도	제3자가 개입

■ 중재

구분	중재	조정
제3자 제시안	양당사자를 기속	자유의사에 기초 거부 가능
절차의 개시	중재계약이 전제 일방 당사자의 신청	양 당사자의 합의

■ 재정

구분	재정	조정
제3자 제시안	기속력 有(준사법적 절차)	기속력 無

52

VI. 조정제도의 이해

5. 조정의 구분(조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행정위원회형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 행정기관 소속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 법인소속형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독립적 조정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법원부속형

행정쟁송과정에서의 법원의 조정

※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한 민간형 조정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53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1. 공공갈등 관리의 의미

○ 일반적 의미

- 일단 발생한 갈등의 강도(intensity)를 조절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따라서 갈등의 예방은 물론 갈등의 해결(conflict resolution)과도 거리가 먼 개념

○ 우리나라

-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갈등관리 :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등 갈등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일체의 활동

54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2.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체계

배경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生 또는 相勝(win-win) ○ 사회통합 ○ 민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예방과 해결 ○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주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협력(참여와 절차적 정의) ○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 ○ 사회적 합의 ○ 당사자간 합의 ○ 의사소통과 숙의(deliberation) ○ 협치(governance)
절차와 수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심의회위원회 설치·운영 ○ 참여적 의사결정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협의회 ○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지원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지원센터

55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3. 갈등관리 법령의 의의와 목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07. 2. 6. 대통령령 제19886호)



의 의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목 적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

56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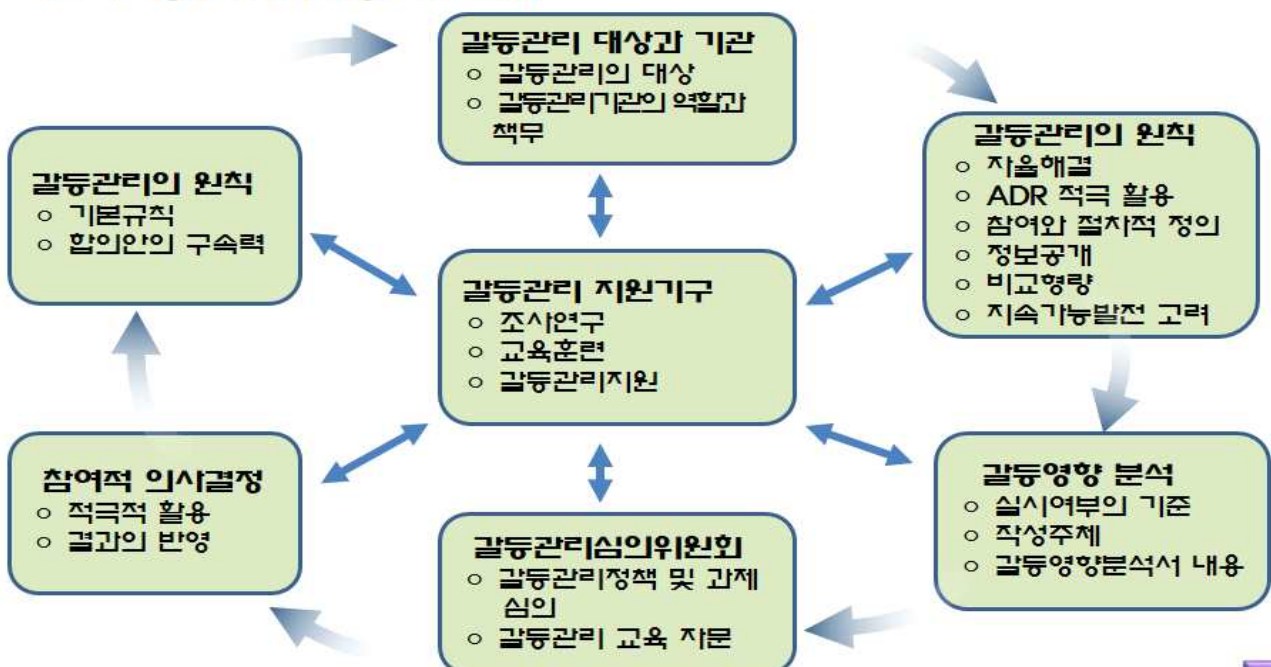
4. 갈등관리 법령의 규정 구성

단계	내용
정책입안단계 (갈등의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빈발 부처에 갈등관리심의회위원회 설치 ○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갈등영향분석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정책집행단계 (갈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이 정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 ○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운영을 통해 갈등관리의 체계적 지원, 관리

57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5. 갈등관리 법령의 체계



58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6. 갈등관리 법령 상 갈등관리 프로세스



59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7. 갈등영향 분석

(1) 개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 분석 및 갈등 예방대책 강구 ▶ 합의 형성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정책의 결정, 추진으로 갈등증폭 ▶ 정책결정 전에 갈등구조 파악 ▶ 실현 가능한 갈등해결방안을 강구
실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해충돌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60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2] 기본 요소

갈등개요 (Conflict Prof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간략한 개요 ○ 갈등문제 및 도전사항 이해 ○ 정책 또는 사업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 ○ 갈등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그 내용 ○ 갈등이 지닌 위험도 평가
이해관계자 분석 (Stakeholder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분석 및 분류 ○ 갈등지도 작성 ○ 이해관계, 입장, 관계를 명확히 파악 ○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계 및 연합관계 파악 ○ 목표 집단 결정 및 목표집단간의 구분 ○ 협력을 위한 파트너 선정
원인분석 (Cause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구조적 요인을 조사 ○ 시간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 구별 ○ 요인별 우선순위의 설정 ○ 갈등해소 촉진요인과 갈등해소 방해요인 구별
동향 및 기회 (Trends &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갈등전개 현황 파악 ○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의 설계 ○ 다음 단계의 전략형상과 계획의 기준 ○ 장·단기 조치의 구별 및 각 조치별 집행시기 결정 ○ 이해관계자분석, 원인분석을 포함한 분석결과 매트릭스 작성

61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8.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임기 : 2년)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 ○ 갈등예방 및 해결 관련 법령 등의 정비 ○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 ○ 교육훈련의 실시 ○ 갈등영향분석 ○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 분쟁해결보다는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기구 ○ 갈등관리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구 ○ 갈등관리를 위한 논의의 장이자 의견수렴 통로

62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9. 참여적 의사결정

[1] 의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을 포함시켜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일련의 과정

[2] 의미

우리나라 공공갈등은 대부분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의 의사결정에서 비롯

→ 참여의 보장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3] 구성 요소

- 시민의 참여 :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의 참여를 포괄
- 참여자의 학습과 숙인 :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과 학습
- 참여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

63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4] 참여의 효과

- ①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의 조화를 통하여 정책결정과 관리의 품질 개선
 - 협력과 지식 공유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결정의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② 이해관계자의 지식과 토론기술 개선

- ③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극대화
 - 미래의 불확실성, 불안과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실행과정에서 저항 최소화
 -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는 결정 내용과 무관하게 과정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

- ④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기회를 제공
 -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숙의민주주의적 제도

- ⑤ 참여자들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관리 책임의 공유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2012) 자료

64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5]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65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6] 참여과정의 주요 수단과 방법

1. 참여적 의사결정 유형의 선택과 관리계획 수립
- 기준 : 선택 목적, 역량, 시급성, 복잡성, 갈등 정도



2.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석



3. 이해관계자 동원(자발적 참여)



4. 참여역량 평가와 역량 제고



5.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6. 협의체 구성 및 운영(협상 및 조정)

66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10. 갈등조정협의회

[1] 의의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안을 창출해가는 갈등해결의 메커니즘
-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자율적인 갈등해결 수단



67

VII. 공공갈등 관리제도

[2] 운영 프로세스

적용 탐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쟁점과 이해당사자 파악 • 갈등조정회의 준비 실무팀 구성 • 이해당사자 및 조정회의 참여 대표자 확인
구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쟁점, 참여수준에 대한 의견 교환 • 이해당사자의 동의 확보 • 갈등조정협의체에 참여할 예비대표 선정 •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고 • 갈등조정협의체 참여자 조정 및 구성완료
운영규칙 마련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규칙 마련을 위한 예비모임 • 진행자 선정 • 기본운영규칙 마련 및 확정
조정 시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상정 후 회합일정 및 회합의 통보와 공고 • 주요 갈등쟁점의 제시와 토론 • 사실 정보 확인 및 추가적 정보 수립
합의 초안 마련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및 조정 시도 • 합의초안의 마련
합의안 도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초안에 대한 합의시도 • 최종합의문 작성 후 최종합의안 도출

68

Ⅶ. 공공갈등 관리제도

12.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점

① **현행 규정은 관리대상을 중앙부처에 한정**

- 갈등빈도는 중앙보다 지방, 중앙 : 지방간에서 나타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갈등관리의 제도화 필요

②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의 기능을 수행**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형식적 관리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개발 필요

③ **갈등 예방과 해결 프로세스 규정이 모호**

- 갈등예방의 핵심적 활동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미활용
- 실효적 갈등 예방과 해결 프로세스 구축 미흡

④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미흡**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도입 지연
-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규모 미흡



시·군 잠재갈등 현황

충남도 현존갈등 및 잠재갈등 현황

○ 천안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4. 1, KTX 천안아산역 개통과 더불어 택시사업구역 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천안아산역 사업구역 관련 천안/아산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천안] 천안아산역 부근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요구 [아산] 공동사업구역 지정 반대 또는 천안 시내권까지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4. 1 역사개통 이후 양시 택시업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집회(7회), 중앙·道 조정회(26회) 국토부(대중교통과) 실태 점검('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0.11) 조정협의회 구성 ('10.11/ 10명/ 관련기관 및 업체)/운영(20회) 공청회('12.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용역(안)천안시 반발로 진행 중단 천안 택시업계 집회('12.6.4/ 2,7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체제로 운영 중으로 향후 사업 구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등 진행 일정 없음.
② 천안문화재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6기 인수위원회의 천안 문화재단 해산 권고에 따른 정책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인수 위원회의 천안문화재단 해산 권고에 따라 관계자 및 지역 문화예술계, 천안시간 정책갈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7월 인수위 발표를 둘러싼 갈등 확산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 결정 '14. 8월 천안NGO센터 주관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자 등 75명 심층면담 및 그룹 미팅 조사결과 제출 '14. 9월 기능쇄신을 통한 존속 결정 발표 '14. 11월 ~ 현재 재단 기능쇄신을 위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3월 정책대화 종료 및 기능쇄신안 제출 '15. 3월 문화재단 쇄신안 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재단 이사회 의결,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공주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천태산 석산 개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천태산 토석 채취 위치 : 공주시의당면 덕학리 갈등개요 :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비선회시설/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 교통불편, 자연경관 훼손, 주민갈등유발 등의 이유로 천태산 토석채취허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3~10월 : 진정서 접수 '14.12.23 :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접수 '14.12.29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 의견수렴 '15.01.16 :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서접수 (석산개발반대대책 위원장 박한규) '15.01.20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 '15.01.23 :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2015.03.20.한) '15.01.3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15.02.03 : 주민 의견서 접수 (천태산 토석채취허가 반대대책 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한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의견과 실과의견을 종합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② 노인복지 시설 신축 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요양원설치 위치 : 공주시 옥룡동 108-3 갈등개요 : 요양원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우려 비선회시설 /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룡 덕성그린타운아파트 주민 들로부터 아파트와 인접, 노인 복지시설(요양원)이 들어올 경우 아파트 값 하락 등 재산권과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사고위험 및 소음과 환경오염 등 피해가 우려 된다는 주장(아파트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9.17 : 건축허가 접수 '14.10.16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11. 17까지) 진입로 폭 4m이상 확보,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조사 후 결과 제출등 '14.9.29 ~ 11.20 : 시장님 면담(1회), 국장 면담(1회), 주민대표 허가과 방문(2회), 집회신고(2차) 및 시청정문 앞 집회(13회), 다수 진정민원 회신(2회) '15.4.30 : 2차례 까지 보완연기 신청서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계획(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축주로 부터 보완에 따른 연기신청을 '15. 4. 30 까지 요구한 상태 진입로 확보에 따른 시설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 변경 필요 최종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후 관련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계획 갈등조정 계획 및 지원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후 추진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보령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보령~서천 간 부사 간척지 경계 결정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1,191ha 사업비 : 184,602백만원 사업기간 : 1985년 ~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경계갈등 (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결 (서천군안 수용) ⇒ 대법원 재소(보령시, 서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판결 후 계구역 조정, 지역 주민들 간 내적 갈등 상승 예상
❷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시 신흥동 갯배마을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포럼 개최 등 해결노력 역학조사, 건강조사 등 지속적인 원인규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추진을 통한 갈등 해소 추진
❸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권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찬성VS유치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시 ⇒ 유치신청 한국마사회 ⇒ 승인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외 발매소 유치시 시민단체, 학생 등 대규모 집회 예상

○ 아산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당진평택항매립지 경계분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만 일원 공유수면 매립 방식에 의한 당진평택항 조성 (사업주체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충남도(아산시, 당진시)와 경기도(평택시)간 행정경계 분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 계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중 직권조정 예정

○ 논산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바이오가스화) 시범 사업 추진 관련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929번지외 7필지 규모 : 130톤/일(가축분뇨 10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은 현재 축협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시설 악취를 완벽하게 차단한 후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12월 :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완료 2015. 1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승인(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로서는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서산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업비 : 1조22억원) · 방식 : 가로림만 입구에 2,053m의 제방 축조, 발전기 설치 · 용량 : 520MW(26MW×20기) · 내용 : 발전소, 제방, 해양레포츠 산업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간 찬성 및 반대 등 이해 갈등 양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에너지(전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차원 건설 추진 ② 서산시 : 생태환경 피해 및 어민 생계터전 상실 발전소 건설 부정적 ③ 태안군 : 상대적 지역개발 기대 심리가 커 발전소 건설에 긍정적 ④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투쟁위원회(반대) :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 팽배, 어민피해에 따른 생계터전 상실 우려 등 전면 백지화 요구 - 보상대책위원회(찬성) : 어족 자원 고갈로 어업활동 불가,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관광 어촌 기대, 조속한 건립 희망 ⑤ 가로림조력발전(주) : 국가 에너지(전력) 확보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차원 건설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9. : 가로림조력발전(주) 법인설립 ◦ '07. 9.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환경부→서부발전) ◦ '10. 3. : 발전사업 허가(산업자원부, 103차 전기위원회) ◦ '12. 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환경부→지경부) ◦ '14.10. 6.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산업부) ◦ '14.10. 6.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산업부) ◦ '14.12. : 가로림만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따라 찬반 의견 대립은 소강상태 - 단, 찬반주민 간 비방과 배척등 지역갈등은 계속되고 있음 ◦ 사업자 측에서는 찬성주민들이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결정도 못하는 실정 ◦ 가로림만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사업재개 가능성이 열려있어 향후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 남아 있음

○ 계룡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금(합의)갈등	◦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 1993년부터(20여년) “도시개발행위” 제한으로 주거의 신축·보수 등 제한이 있었으며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 완화로, 그 간 제한 된 해당지구 주민들은 본 개발사업을 계기로 정당한 보상요구(65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03.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 2012. 10.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행안부) ◦ 2013. 07.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12.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승인(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단계별 보상과정에서 주민과 보상관련 갈등예상 ※ 시에서는 보상결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용방침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혜택 주민과 비혜택 주민간의 형평성논란 갈등 (완료)	◦ 시골마을풍경스케치사업(벽화사업)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나분들 일원(광석1리) 공사착공 사전 절차인 사유재산(벽, 대문 등) 사용승락서(주민동의서)징구 과정에서, 한정된 사업비265백만원[도비(50%)시비(50%)]로 인하여 사업혜택 주민과 비혜택 주민 간 사업량 확정 협의지연(주민간 반목과 갈등)으로 공사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3. 道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2012. 9. 계약(265백만원) 및 착공계 제출(협상계약) ◦ 2013 5. 주민과 협상 지연으로 공사 중지 ※ 사업내용 및 사업량 확정 협의지연 ◦ 2014. 3. 공사 재착공계 제출(사업 재착공) ※ 사업내용 및 사업량 확정 주민합의 ◦ 2014. 8. 사업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총7회) 등을 통해 상기 사업 목적과 취지가 주민 개인혜택을 위함이 아닌 마을주민 전체적 관점에서 농촌환경개선 사업임을 지속적 설득 하여 사업완료\

○ 당진시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9월 현재판결로 당진시에 귀속된 공유수면매립지를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2009.4.1.)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에 따른 관할권 분쟁 	<p>< 당진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04년)으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진시 토지 등록행위는 정당 <p>< 평택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장관의 결정을 받지 않고 당진시에서 등록한 토지는 위법, 평택시 관할로 결정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02.2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당진·평택·아산시 의견청취] 2014.04.04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현장방문[기업체 의견청취(3개)] 2014.07.03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차 현장방문[실무부서장 의견청취] 2015.01.20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3월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관할권 변경 결정시 대법원 소송 등 법적 대응
② 군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갈등(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 및 원인 : 00대대 이전사업추진 ※ 관계법령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진행단계 : 시기 미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전으로 주민에 고시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 후보지 발표 시 지역주민 집단민원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01. 20. : 합의각서 국방시설 본부에 제출 '15. 03월 중 : 합의각서 체결 및 국방부 고시 예정 '15.~'16 : 대체시설(이전예정지) 토지보상 '15.~'18 : 대체시설 조성(군부대 이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후보지 발표시 예정지 지역주민 및 토지주 이전 반대 집단민원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숙원사업 요구 사항 반영 등 필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 취득

<p>③ 345kV북당진 ~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 신설 345KV 북당진 ~ 기설 345KV 신탕정 - 당진구간: 16km 39기(송악15, 신평18, 우강6) - 아산구간 19.5km 48기 ※ 송악15기, 신평18기, 우강6기 [지중화 구간 : 3.5km, 철탑 8기철거] ◦ 준공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지 : 2015. 12. - 지중 : 20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은 태안화력 9·10호기, GSEPS 발전소 추가증설에 따른 송전선로를 북당진 (송악, 신평, 우강) ~ 신탕정 건설 계획 <p>< 대책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선로 설치 불가하며 국도 38호선 이용 지중화 요구 (12km) <p>< 한국전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지중화 6km 외 수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04 :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접수 ◦ '12.7~'13.1 : 해상선로 추진 협의 (국회, 당진시, 향만청, 한전, 금강청) ◦ '13.6.20 : 한전 입장 선회[해월 → 육지선로 및 일부 3.5km 지중화] ◦ '14.2.9 지중화 구간 연장요구 : 신평 5.5km, 송악 2km ◦ '14.5.27 :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한전 → 산자부) ◦ '14.8.12 :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 제시(시→ 산자부) ◦ '14.11.12 ~ : 지중화 검증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회의 진행(8회) - '15.1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노선 및 지중화 6km 제시(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과 38국도를 이용한 노선 결정 및 지중화 구간 확정을 위한 협의 ◦ 송주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한전 특별지원사업을 어촌계에 일 부지원 하는 방안 협의
<p>④ 345kV 당진화력 ~ 북당진 송전선로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선로길이33km(예상) ◦ 준공시기 : 2021. 6월 ◦ 사업지역 : 당진시(석문, 고대, 송산, 송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 765kV 인출 송전선로 고장대비 및 당진화력 및 당진 에코파워 발전력 안정적 수송을 목적으로 345kV 당진 화력 ~ 북당진송전선로 건설 추진 ◦ 대책위 : 765kV 송전선으로 당진화력과 당진에코파워 전력을 수송할 수 있으므로 예비선로 건설은 절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6월 사업착수(입지선정용역 착수, 기초자료 수집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과 대책위 간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예상되며 765kV 송전선로로 송전 가능 함으로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함

<p>⑤ 석문국가산업지 에코타운(소각매립) 조성에 관한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석문면 삼봉리 석문국가 산업단지 내 ◦ 면적 : 185,783㎡ (매립시설 - 면적 : 131,200㎡, 용량 1,850천㎡) (소각시설 - 면적 : 10,000㎡, 용량94톤/일 ×2기) ◦ 승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사업시행자 : 대일개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폐기물이 전국에서 반입되는 사황을 우려 ◦ 시설에 대한 우려와 매립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어업피해 발 생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 함(공청회시) ◦ 환경단체 및 영향지역 주민 (송산면)은 소각시설이「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상 필수시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08.2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14.10.08.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14.11.04. 공청회 요구로 무산 ◦ 2014.11.17 : 주민의견 제출서 접수 ➡ 사업자의 추가설명 필요(일방 적인 사업자의 주민설명회 보다는 공청회를 요청 ◦ 2014.12.3 : 공청회 개최 ➡ 영향지역 주민 및 사업체에서 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권자가(금강유역환경청)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중임 ◦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지자체 의견 제출외 권한이 없으며, 사업주와의 이해 견해 차이로 갈등 발생시 중재가 어려움
---	---	--	---	--

○ 금산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갈등	◦ 금산군 대전 편입에 대한 주민간 찬반	◦ 금산군 대전 편입에 대한 행정구역변경추진위(찬성)와 통합 반대추진위(반대)간 의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2. 18. 행정구역변경 금산군민 입장에 따른 건의문 채택 (군의회 만장일치 찬성) 행정자치부장관에 건의 ◦ 건의문 채택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고조되는듯 하였으나, 현재 군민들 동요가 없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이 없자 군의회 의결자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 ※ 2015. 1월 행정구역변경 추진 사무실 폐쇄 	◦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행정구역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활동 중단으로 갈등해소 전망
② 우라늄 채광인가 갈등	◦ 채광 불인가처분에 따른 광업업자와 주민 간 갈등	◦ 청정지역 금산 이미지 실추 및 군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다는 군민의견(반대)과 에너지 개발의 이로움을 주장(찬성)하는 광업업자 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3. 31 : 채광인가신청 ◦ 2010. 3. 3 채광 불인가처분 (충청남도) ◦ 2010. 5. 31 행정심판청구 (광업권자→지경부) ◦ 2011. 9. 2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지경부) ◦ 2011. 11. 30 행정소송제기 (광업권자) ◦ 2013. 11. 27 행정소송 패소 2심 항소제기 ◦ 2014. 10. 30 항소심 패소 ◦ 2014. 11. 14 대법원 상고 	◦ 행정심판 기각 및 행정소송 패소로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부여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은산면 대양리 폐기물매립장 설치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여군 은산면 - 면적 : 421,206㎡(127,638평) ◦ 사업자 : (주)한맥 - 운영기간 :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장 설치진행 ◦ 주민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토지매입 등 절차 이행, 업무방해로 주민고소(고발) ◦ 주민 : 사업반대 입장 고수 및 반대시위 ◦ 부여군 : 3차례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청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사업진행 -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제기 가능성 ◦ 주민 : 절대반대
❷ KTX공주역사내 택시 공동 사업 구역 설치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공주 이인면 ◦ 기간 : 09.9~05.3 ◦ 개통 : 2015.4월초 ◦ 주변 자자체 : 부여, 논산, 계룡,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영업권판단 - 공주시: 단일 사업구역 - 부여군: 공동사업구역 (인근 시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 조정 건의 - 2014. 1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 실무협의(3차례) - 사업구역 통합에 반대 및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택시업계 반대 입장 고수 예상 ◦ 충청도에서 적극 적인 자세로 설득 및 중재

○ 서천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① 보령-서천간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사공구 간척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이 담수호 및 하천과 농경지 등으로 조성 ※ 농경지 : 653ha(서천군 416ha, 보령시 237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보령 간 불합리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대립 서천군은 새로 만들어진 하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변경 보령시는 기존경계를 중심으로 면적이 비슷한 정도로 경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10 :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서천군의회 의견서 제출(도) '12.5: 행정구역 결정 신청(행자부) '13.7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14.7: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결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군안으로 하천중앙으로 경계 의결 보령시의 부사매립지 관리비용 중 일정액 서천군 균등 상환 이행명령 '14.8:서천군 대법원 소 제기(관리비용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시 대법원 소 제기(귀속결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
②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하구둑 준공('90년) 이후 수질 악화, 토사퇴적, 연안어장 황폐화 및 장항항 역할 무실 등 문제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사업에 금강 하구둑 기수역 복원을 서천군 에서 제기하면서 군산시(전북)와의 분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군 :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으로 기수역 복원 주장 군산시 : 대체용수 공급 대안이 없어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4: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국토해양부) '13:충남도 금강비전 실행계획수립(금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포함) '13.8:부분해수유통시 염분확산 수치모델링 용역추진(서천군) '13.8:해수유통결의문 채택(충남시장군수협의회) '13.10:금강 해수유통 반대결의안 채택(전북도의회) '13.11:충남도민 15만명 금강 해수유통 촉구 서명 '14.7:충남도 금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추진 '14.12: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해수부) '15.2:군산시와의 행정협 의회 재개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 및 중앙부처와 연계 금강하구 문제 해결 노력 군산시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승적 발전방향 모색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③ 군산 LNG 복합 화력발전소 어업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LNG복합 화력발전소건설 가동(700MW급 1기) - 온수 및 화학물질 배출로 해수온도 상승, 해양환경에 영향 - 서천군 김양식 등 어업피해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 해역의 환경영향평가 누락과 주민의견 수렴 누락 - 냉각방식(폐회로식)시스템으로 개선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 - 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 조사 실시 및 어업피해 보상 요구 ◦ 한국서부발전 - 어업인의 각종 요구사항 부분 수용 검토 -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하되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2 : 발전소 건설반대 집회 ◦ '10.12 : 어업손실조사, 취배수구 공개요구 집회 ◦ '12.12 : 당사자간 협상 추진(일부 합의) ◦ '13.5 : 사후 환경영향조사 조사지점 협의 - 이후 어선을 포함한 어업피해조사 요구에 용역 진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측에서 상호 합의를 통한 환경영향조사 추진 제안 ◦ 어업피해조사 완료 후 어업인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갈등 해소 전망
④ 서천-군산간 공동 조업구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 (조선 총독부/1914. 3. 1), 현 해상경계설정 ◦ 서천군 관내 해역이 전북도에 편중, 조업구역 협소로 어업인 소득 저하는 물론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수산업법 위반 단속으로 어업인 범법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경계 불합리로 어업인 조업 구역 협소 도 및 업종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2: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농림부) ◦ '11.4:공동조업수역 설정 건의(국민권익위) ◦ '12.10:해상경계 갈등 조정 T/F팀 협의회(농림부) ◦ '12.12: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법적대응 소송선임 ◦ '13.4: 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에 따른 법적대응 소송 ◦ '13.11:형사소송 선고, 위헌법률 신청건 심리 - 선고결과 불복 항소 ◦ '13.12:헌법소원(현재) ◦ '14.12: 수산업법 위반 형사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 '15:헌법소원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소원 진행중이나 공동 조업구역 지정 어려움 판단, 대응책 마련 추진 - 중앙정부에 공동조업구역 지정 범제화 요구 -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 대응 요구

○ 청양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청양 폐기물매립장설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 호 : (주)양지 - 대표자 : 박찬석 - 신청지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산8-1, 일원 업 중 : 폐기물최종 처분업 (사업장일반 폐기물매립장) 면 적 : 34,500㎡ 용 량 : 1,056,196㎥ 사용기간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최종처리업 설치 반대 기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소송진행중) 건설폐기물 허가 취소건은 충남도 특별위원회 활동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갈등 양상 변화 기존의 건폐업 허가 취소는 도별도위원회에서 법률검토 중

○ 홍성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사업 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 장항선 2단계 건설사업 위 치: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 은하면 중리 사업비 : 9,499억원 사업량 : 11.5km ※ 총연장 = 32.4km -신성~주포 18.0km -남포~간치14.4km 사업기간 : 2010 ~ 2016년 사업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 기본계획 노선과 광천역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 집단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심화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항선 철도가 경유 하는 지역 주민 간 입장차가 매우 큰 실정으로 협의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 예산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시 악취 발생, 지하수오염 우려등으로 지역주민의 입주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소송중(1심 원소 중) - 현재2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청은 지역주민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패소할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발생 예상
❷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두비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 생활불편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업체인 (주)두비원에서 공정 중 악취발생에 따른 생활 불편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청에서 (주)두비원 방문(2년간)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 및 생산 공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발생 공정 개선하여 악취가 저감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나 공정의 특성상 악취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❸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관련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가칭) 서부내륙고속도로 - 위치:평택-익산간 - 사업비: 2조 7,000억원 - 사업기간: : 2018~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안을 놓고 민-민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사업 제안업체인 포스코 건설에서 지역노선을 고려한 노선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결과 및 검토 내용 제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노선이 결정되어 공사 시행에 들어가야 하나 지역민간 이견이 있어 갈등 상존

○ 태안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❶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에 따른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안면(승연, 신야, 중장) 일원 ◦ 면적: 2,993km² ◦ 기간: '91~'20 ◦ 사업비: 1조474억원 ◦ 대상: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무산 주민반발 ◦ 장기간(24년)규제로 주민 불만 ◦ 도(지사) 사과 요구 ◦ 조기 대책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6: 도, 무산기자회견(국장) ◦ '15.1.27: 군, 기자회견(군수) ◦ '15.1.28: 비대위 항의 방문(부지사) ◦ '15.2.6: 비대위 항의 방문(도지사) ◦ '15.2.13: 안면방문(국장) ◦ '15.2.17: 도지사 안면도 방문 (주민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대책 미수립시 주민 집단 민원 예상 ◦ 사업추진을 위한 범 협의체 구성 ◦ 장기 저리 임차방안 추진 요구 ◦ 부분개발 요구 등